

보도일시 2024. 5. 13.(월)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시)

배포 2024. 5. 13.(월) 오전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확산
-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 연계로 바다생활권 매출액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 목표
-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바다생활권을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갈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5월 13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2배이고, 어가인구 감소율**도 농가인구 대비 2.5배 높아 도시·농촌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소멸이 진행 중이다.

* 고령화율(전국/어촌) : '10년 9.1%/23.1% → '15년 13.1%/30.5% → '23년 18.2%/48%

** 어가인구 : '18년 12만명 → '23년 8.7만명(△27.5%) / 농가인구 : '18년 231만명 → '23년 208만명(△9.9%)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장관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 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수산 분야 민생현안, 규제혁신 과제 발굴하여 집중 관리

** ①남해권 : 귀어촌 확대(2.28), ②동해권 : 해양레저·관광(3.18), ③서해권 : 수산업 부가가치(4.18)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 ‘어촌과 ‘연안’에서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의 생활권을 의미하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직관적 이미지 부여

이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 전략 ①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통합 지원

< 전략 ②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 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그리고,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 전략 ③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 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 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 전략 ④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 외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610)
		담당자	서기관	신철용 (044-200-5611)

* 지면상 관계부처 담당자는 생략했으며, 어촌양식정책과 문의 시 세부 안내 예정

참고 1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요약)

I 추진배경 및 문제점

1. 추진배경

- ☐ (인구감소) 저출생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 지정('21년 행안부)
* 어촌·연안이 위치한 74개 시·군·구 중 31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 (어촌소멸) 어촌은 도시·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에 직면(인구감소율 농가 대비 3배, 고령화율 전국 대비 2.5배)
* 고령화율(전국/어촌) : '10년 9.1% / 23.1% → '15년 13.1% / 30.5% → '23년 18.2% / 48%
** 어가인구 : '18년 12만명 → '23년 8.7만명(△27.5%) / 농가인구 : '18년 231만명 → '23년 208만명(△9.9%)
- ☐ (현장소통) 어촌의 현실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등과 소통하며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
* 동·서·남해권 토크콘서트를 통해 85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민생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2 문제점

- ☐ (어촌) 열악한 정주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신규인력 진입도 어렵고,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고 있는 상황
* 삶의 질 만족도 조사 : 도시(6.3) > 농촌(5.7) > 어촌(5.2) > 섬 지역(3.6) ('23, KMI, KREI)
- ☐ (연안) 해양레저·관광은 계절적 성수기가 존재하고, 복합 관광시설 미비와 연계 콘텐츠 부족으로 추가적인 가치 창출에 한계
- ☐ (기존정책 한계) 기존대책은 수산업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했으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어촌의 낙후된 이미지로 청년 관심유도 한계

☞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과는 달리 '연안'지역은 해양레저·관광 등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높은 점을 활용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 필요

II 어촌·연안정책 추진방향

- (정책 대전환) 청년의 관심 유도를 위해 ‘어촌*’과 ‘연안**’을 통칭한 ‘바다생활권’ 중심으로 수산업·해양레저 등 관련 정책을 연계

* 호수·바다에 인접한 어항 배후지역 중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동(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 연안해역(바닷가·영해), 그리고 연안해역으로부터 500m 이내 육지(연안관리법)

- (상호보완) 어촌의 부족한 소득원·정주여건을 해양관광객으로 보완하고, 관광객은 어촌의 체험형 콘텐츠, 수산물 먹거리로 만족도 제고
- (정책범위) ‘어촌’과 ‘연안’에서 실거주하는 국민 390만명*이 살고, 어촌·연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공간
 - * 어촌 조사구역(어항과 배후지역 등) 내 통신망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추정(KMI)
- (경제가치) 수산업·가공, 해양레저·관광 등 연계로 경제적 가치 제고
 - * 어촌 매출액 2.7조원 → 바다생활권(어촌+연안) 매출액 40조원('22년, 카드매출 추정)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조성

비전	풍요롭게 살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 생활권(어촌+연안) 바다에서 시작되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		
목표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확산	바다생활권 매출액 '22년 40조원 → '27년 50조원	바다생활권을 찾는 관계인구 확산
세부 추진 과제	전략 1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 민간투자 유치 확대 ② 도시형 바다생활권 : 부산, 인천 등 →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 강화 ③ 지역형 바다생활권 : 지자체 맞춤형 특화전략 마련 		
	전략 2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마트·자동화 혁신으로 수산업 매력제고 ② 어촌계 어장 활용 수산업 일자리 개방 ③ 청년 등 신규 인력 진출 확대 (^{'22년} 1,256명 → ^{'27년} 1,800명) ④ 부가가치 창출로 수산업 소득 증대 	전략 3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촌에서 즐기는 체험 여행 ② 국민이 힐링할 수 있는 바다쉼터 ③ 해양레저·관광 연계로 머물고 싶은 여행 	
	전략 4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거·교통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② 의료·교육·정주여건 등 복지체계 개선 ③ 국민에게 편리한 정보 제공체계 구축 		

Ⅲ 추진방안

1.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 어촌·도시·지역 특성에 맞춘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 (어촌·어항) 민간투자 연계한 경제생활 거점 확대
 -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와 결합하여 핵심거점위주로 투자 강화
 - * 투자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민간투자 수요 적극 발굴
 - 국·공유지(약 5,800만평) 활용,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해양·수산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추진
- (도시형 바다생활권) 부산, 인천 등 해양도시 →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 강화
 - 부산, 인천 항만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해양관광 거점 조성(~'27)
 -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집적화 단지(^{24년} 2개소, 목포·부산) 확대
- (지역형 바다생활권) 지자체 맞춤형 바다생활권 특화 전략 마련('25.上)
 - 어촌·연안을 보유한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해양수산 분야 지역 발전투자협약 발굴 및 관련 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2.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 스마트 기술혁신과 어촌 개방성 확대로 양질의 수산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기술혁신) 스마트·자동화 혁신으로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
 - 어선어업은 '27년 이후 규제를 50% 줄이고, 어업 디지털화 추진
 -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 개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자동화 기술을 보급하여 원격으로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
- (어촌계 어장) 마을어장 심사·평가제 도입, 양식장을 청년 등에게 임대
- (신규인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지원 확대, 어촌계 개방시 인센티브 등 신규 어업인 양성

3.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 어촌·연안의 다양한 콘텐츠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 (체험형) 갯벌, 해녀 등 어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확대
 - 어촌체험휴양마을(132개) 스탬프투어, 숙소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
 - 유희시설 활용 어(漁)케이션(現 11개소) 확대, 소규모 관광단지 등 연계
 - (힐링형) 청정 해양생태계와 함께 힐링할 수 있도록 바다쉼터 조성
 -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발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국민안심해안을 활용한 공원 등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
 - (해양레저형) 서핑, 스쿠버 다이빙, 요트, 해수욕장 등 해양레저 연계
 - 해양레저거점을 확대(^{23년} 7개소 → ^{24년} 8개소)하고, 인근 어촌관광 연계
 - 지역별 해수욕장을 활용한 레저스포츠 등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 * (레저) 서핑(양양) / (문화) 반려동물 동반(강릉, 거제) / (향토체험) 어촌지역축제(서산, 남해)

4.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 정부·지자체가 함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 (주거·교통) 관계부처 협업으로 주거(세컨드홈, 지역활력타운 등)여건 개선
 - 주거-수산업자리 연계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 검토, 하수도 확충 등
 - 섬 주민 여객선 운임 경감, 생필품 운송 지원으로 소외도서 제로화
 - (의료·교육·복지) 섬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진료 '섬 닥터' 도입
 - 교육발전특구 연계 정착 인센티브 발굴,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등
 - (정보제공) 정착 정보 통합검색시스템 고도화, 스타귀어인 발굴* 등 추진
- * 귀어촌 스토리, 정착 성공 노하우 공유, 일반 국민 관심 제고 콘텐츠 운용 추진

1. 이번 대책의 핵심은?

❖ 어촌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수산업과 어촌중심에서 벗어나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경제생활 거점을 조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도록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처협업과 지자체와 함께하는 민생·경제 활력대책입니다.**

- 장관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연어독을 통해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소통하면서,
 -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과 85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대책입니다.
- 기존 어촌소멸 대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실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어촌’과 ‘연안’을 통합한 ‘바다생활권’ 중심으로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이번 대책은 종합대책으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반영했지만,
 - 핵심적인 부분은 우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민간투자 규모와 연계한 재정 차등지원 체계로 개편하여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와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민간투자도 다양하게 발굴하겠습니다.
 - 부산, 인천 등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 강화,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정부의 지역소멸대책과 연계하여 지자체 맞춤형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유형에 따라 바다생활권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산업은 청년 등 신규인력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어선어업 규제혁파, 양식장을 핸드폰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자동화 기술의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그리고 어촌과 연안의 관광콘텐츠를 연계하여
연안 관광객들이 어촌에서 다양한 체험형 관광,
맛있는 수산물 먹거리 등을 이용하면서 어촌주민에게는 소득을
관광객에게는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주거, 의료, 복지 등과 같은 정주여건은 이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 이번 대책에서는 최근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3종 지원정책인
세컨드홈, 소규모 관광단지 등과 바다생활권의 연계
지역활력타운, 교육발전특구, 문체부 둘레길 등과의 협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 바다생활권 도입 이유는?

❖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음

- 첫째, 어촌과 연안의 **개별적 특징을 연계하여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임**
- 둘째, 어촌이라는 **낙후된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브랜딩**
- 셋째, 미래의 **어촌·연안의 정책 방향성이자 지향점**

□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 도입은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먼저, ‘어촌’과 ‘연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어촌과 연안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공간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정의로 인해 관련 정책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을 해소하고 어장자원, 해양공간, 어항 및 배후단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둘째로, ‘어촌’이 가진 **낙후된 이미지** 등을 극복하고 청년층 등 전 연령층을 아울러 관심을 끌기 위해 직관적 표현을 도입하였습니다.

-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어촌은 섬 등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기에, 어촌과의 접점이 없으면 어촌을 막연히 낙후된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바다’는 많은 국민들이 찾고 싶어 하는 선망의 공간이기에, ‘바다생활권’이라는 직관적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한번 살아보고 싶고, 방문해보고 싶은 공간으로 브랜딩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바다생활권’은 앞으로의 어촌·연안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지자체들과 **함께 노력**해야 하며,
- 이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한 만큼 다양한 협업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3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인포그래픽)

□ 전략 1 : 테마형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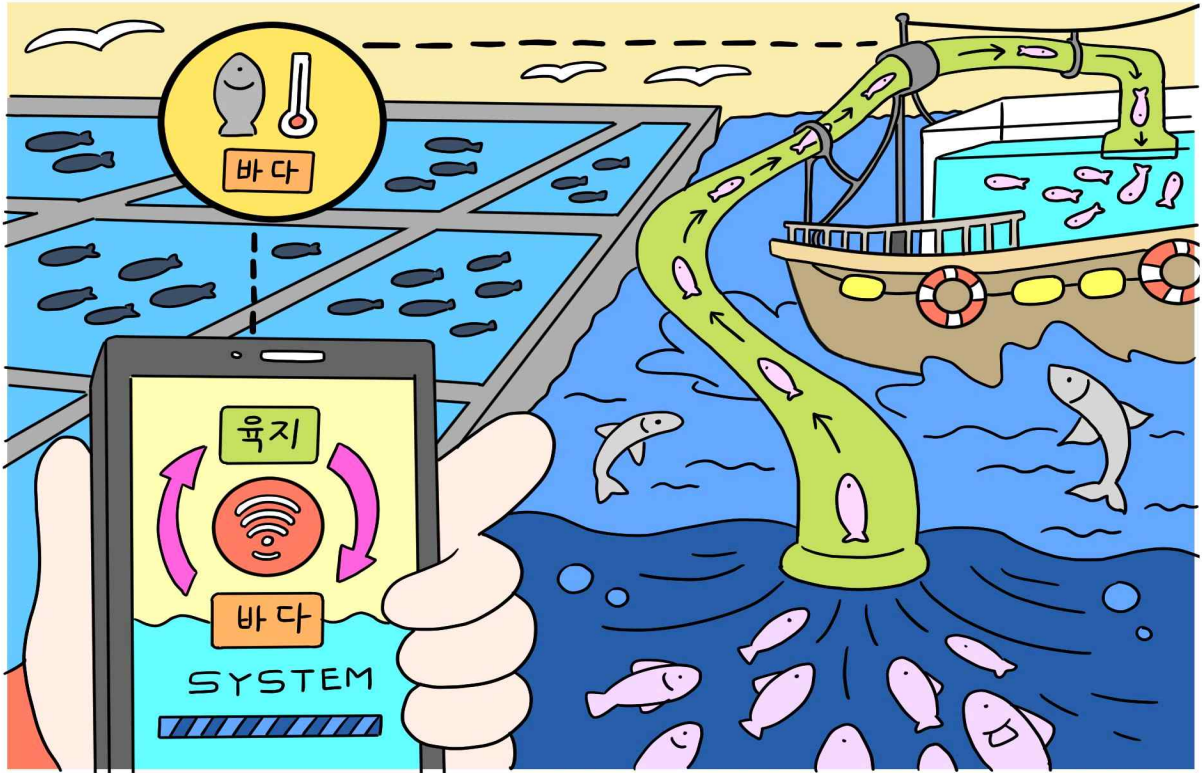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 투자규모 연계 유형화



도시형 바다생활권 : 해양관광 허브 조성

□ 전략 2 : 수산업 기술혁신으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스마트 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 매력도 제고



신규인력 유입과 생산-가공 연계로 부가가치 창출

□ 전략 3 : 어촌·연안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체험형 어촌관광, 힐링형 콘텐츠 등 다양한 즐길거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바다생활권 매력 제고

□ 전략 4 :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바다생활권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어촌·연안



국민에게 편리한 귀어촌 정착 정보 제공